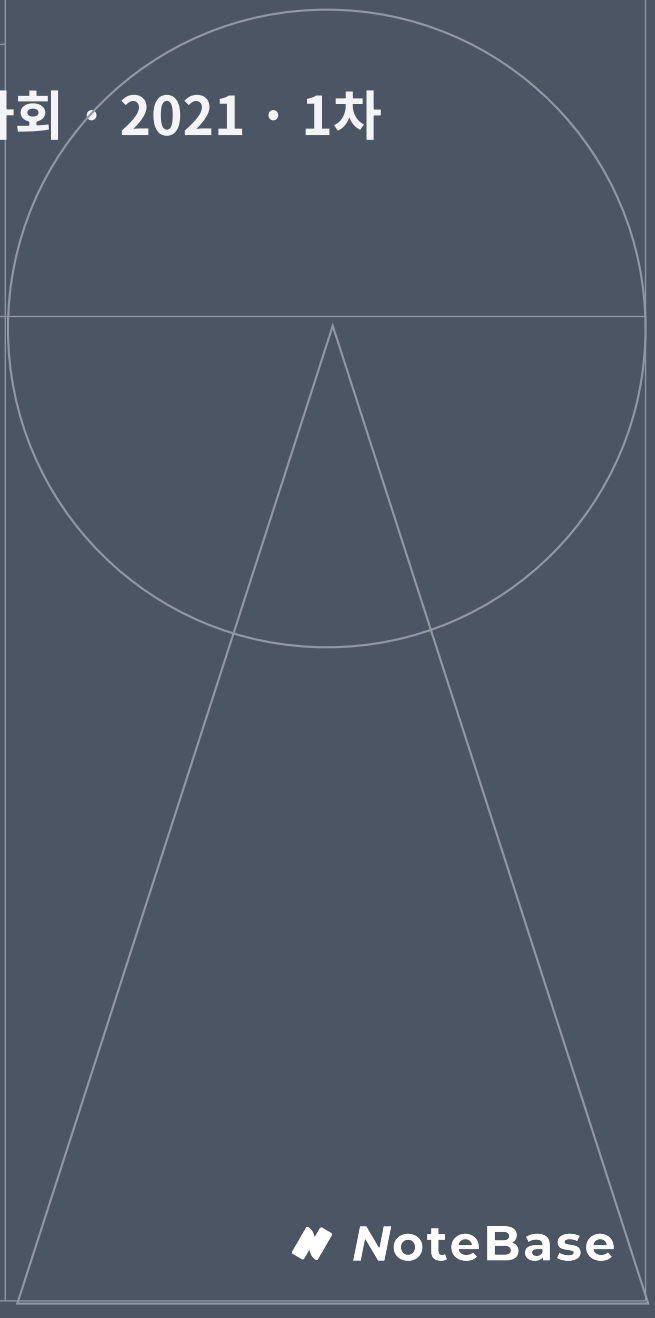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21 · 1차

문 1.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 문	정부 형태	
	(가)	(나)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예	아니요

① (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다.

② (나)에서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은 “아니요”, ㉡은 “예”이다.

④ ㉢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가?”는 들어갈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의회 해산권, 법률안 제출권, 불신임권, 공직 겸직 여부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이고, (나)는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지만, 대통령제는 양자가 엄격하게 분리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이 가능하고,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의원내각제이다. 틀린 표현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다'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선출된 총리가 중심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② O — (나)는 대통령제이다. 권력 분립이 엄격하므로 행정부 구성원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을 '아니요', ㉡을 '예'라고 한 것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내각제인 (가)에서는 가능하고 대통령제인 (나)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들어갈 수 없다'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지는 의원내각제에서 '예', 대통령제에서 '아니요'이므로, 해당 질문은 ㉢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권을 같은 기관의 권한으로 착각하기 쉽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과 의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이 서로 대응하며, 대통령제에서는 두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면 의원내각제,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제로 먼저 판별한다. 이어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에 따라 법률안 제출·불신임·겸직이 가능하고,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원내각제는 해산·불신임·겸직의 권력 융합, 대통령제는 상호 독립과 겸직 금지의 권력 분립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다)를 의미한다.

① 헌법상 기본원리인 (가)는 국가기관 중 행정부만을 구속한다.

② (나)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는 국가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다)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치주의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요구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법치주의 =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형식적 법치주의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정할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실질적 법치주의 =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도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핵심 구분

(가)는 법치주의,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 (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까지 심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치주의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틀린 표현: '행정부만을 구속한다'
올바른 표현: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② O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므로, 독재 권력이 법률의 형식만 갖추어 자의적 지배를 합법으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③ O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과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지도 중시한다.

④ O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여 위헌 법률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행정부만'이라는 한정 표현이 함정이다. 법치주의를 행정의 법률 적합성만을 뜻하는 법치행정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또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②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빈칸을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로 대응시킨다. 그다음 '법률의 형식·절차'는 형식적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내용의 정당성·위헌법률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판단한다. '행정부만'처럼 헌법 원리의 구속 대상을 일부 국가기관으로 제한하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과 기본권 보장까지 본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사회세력들이 어떤 구심점을 찾아서 공존하기 위한 절충 내지 타협의 결과 제정된 것이 헌법인 까닭에, 헌법은 그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조직사회를 정치적인 일원체로 통일시켜 한 국가사회를 창설하는 헌법은 적어도 그 헌법에 의해서 조직된 국가사회 내에서는 모든 질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률규범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보다 어렵게 한다.

②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④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국가권력을 분립하는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헌법의 최고규범성 = 헌법이 한 국가의 법질서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특성이다.

핵심 구분

헌법을 일반 법률보다 어렵게 개정하도록 한 경성헌법 제도와 위헌법률심판·명령규칙심사 제도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한다. 반면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키는 규정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는 권력분립과 관련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제2항은 각각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명령·규칙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을 규정하고,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의 귀속을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헌법 개정을 일반 법률 개정보다 어렵게 하는 경성헌법 제도는 일반 법률로 헌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한다.
② O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된다.
③ O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는 최고규범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④ X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 자체는 맞지만, 이는 행정권의 귀속과 권력분립을 나타내는 규정이지 자료가 설명하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나타내는 규정은 아니다. 틀린 표현: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올바른 표현: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헌법 조문의 내용 자체가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고르기 어렵게 만든 선지이다. 이 문제는 문장의 사실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자료의 '최고규범성'과 연결되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법 개정의 엄격성이나 하위 규범의 위헌 여부를 통제하는 제도는 최고규범성과 연결한다. 국가기관 사이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나누는 규정은 권력분립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경성헌법·위헌법률심판·명령규칙심사는 최고규범성, 행정권의 정부 귀속은 권력분립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가)~(라)의 기본권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류	내 용
(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	국가나 개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다)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개인이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① (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적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국민투표권은 (나)에 해당한다.

③ (다)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④ (라)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이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기본권을 자유권·청구권·사회권·참정권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이 불간섭인지, 권리 구제인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인지, 국가 의사 형성에의 참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구제를 요구할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이다.

핵심 구분

(가)는 자유권, (나)는 청구권, (다)는 사회권, (라)는 참정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고, 청구권·사회권·참정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참여 기회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현행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국민투표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자유권으로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틀린 표현: '적극적·방어적 권리'
올바른 표현: '소극적·방어적 권리'

② X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정권이므로 (라)에 해당한다. (나)는 국가에 권리의 보호와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틀린 표현: '국민투표권은 (나)에 해당한다'
올바른 표현: '국민투표권은 (라)에 해당한다'

③ O
(다)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통해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권이다.

④ X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라)는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다.
틀린 표현: '(라)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이 있다'
올바른 표현: '(나)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적극적·방어적'은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을 결합한 표현이다. 또한 국민투표권의 '투표'와 재판청구권의 '청구'라는 핵심어를 놓치면 참정권과 청구권을 서로 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 국가에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급부 요구는 사회권, 선거나 국민투표를 통한 국가 의사 형성 참여는 참정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불간섭은 자유권, 구제 청구는 청구권, 생활 보장은 사회권, 정치 참여는 참정권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가)~(다)의 민법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민법 기본원리		수정 및 보완된 민법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
계약 자유의 원칙	→	(나)
과실 책임의 원칙	→	(다)

① (가)에 의해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나)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유효하다.

③ (다)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가), (나), (다)와 함께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수정·보완되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사유재산권 존중·계약 자유·과실 책임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계약 공정·무과실 책임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고 보완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무과실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리이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 자체보다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핵심 구분

(가)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하도록 수정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반사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보완하여 일정한 영역에서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정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재산권을 오직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틀린 표현: 공공복리만을 위해
올바른 표현: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② X
노예계약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린 표현: 노예계약은 유효하다.
올바른 표현: 노예계약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③ X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과실 책임이 아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틀린 표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올바른 표현: 제조물의 결함으로 법률이 정한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④ O
근대 민법의 사유재산권 존중·계약 자유·과실 책임 원칙은 현대에도 기본원리로 작용한다. 다만 (가)의 소유권 공공복리, (나)의 계약 공정, (다)의 무과실 책임 원리가 이를 제한·수정·보완하여 함께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공공복리만을 위해'는 재산권의 사익적 성격을 없애는 과도한 표현이다. 또한 ③은 과실 책임의 원칙과 이를 보완하는 제조물 책임을 뒤섞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제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 원리와 현대의 수정 원리를 대응시킨다. 사유재산권 존중에는 소유권 공공복리, 계약 자유에는 계약 공정, 과실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이 대응한다. '오직',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과 같은 제한 표현이 원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재산권에는 공공복리, 계약에는 공정, 책임에는 무과실 보완이 결합된다.

NoteBase

문 6.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원칙과 예외,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나중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이다.
철회권 =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아래 자신의 의사표시를 거두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16조에 따라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061조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라는 민법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O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그 범위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민법 제6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X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이며,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O
민법 제1061조에 따라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 선지의 '만17세'는 현재 조문의 '17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연령 기준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③의 '언제든지'가 함정이다. 상대방의 철회권에는 '추인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붙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성년자 관련 선지는 먼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고, 상대방 보호 제도에서는 추인 여부와 계약 당시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언제든지', '항상'과 같은 무제한 표현은 요건이나 예외가 생략되었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미성년자 계약의 상대방은 선의일 때만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NoteBase

문 7.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실업, 빈곤, 근로 조건의 악화, 소비자의 피해, 환경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법 영역이다.

① (가)는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가)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③ (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④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은 (가)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사회법이 사적 자치에 공적 규제를 더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빈곤, 열악한 근로 조건,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생활관계에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결합한 법 영역이다.

핵심 구분

사회법은 개인을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보완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 한다. 따라서 사회법의 중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 문제를 조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법은 원래 사법에 맡겨졌던 고용·거래 등의 영역에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가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 보호 문제를 해결한다.

② O — 사회법은 당사자를 추상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형식적 평등보다 현실의 격차를 보완하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이다. 이는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권적 원리의 취지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사회법은 사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④ O —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의 사회 문제를 공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사회법 영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라는 표현을 사회법의 약자 보호와 혼동하기 쉽다. 사회법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현실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빈곤·근로 조건·소비자·환경 문제, 사법 영역에 대한 공법적 규제, 실질적 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제시되면 사회법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국가권력의 침해를 막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사회법의 핵심 취지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이다.

NoteBase

문 8. 이자율, 물가상승률, 주식가격, 채권가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채권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② 내년에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자금 수요자는 대출 시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을 선택할 것이다.

③ 시중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④ 시중 이자율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 이자율과 채권가격·주식가격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채권가격은 채권이 지급할 미래 현금흐름을 시중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므로 시중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주식가격도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자율 하락은 할인율을 낮추고 주식의 상대적 매력을 높여 주식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또한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내년의 물가상승 기대가 커지면 채권 보유로 얻는 원리금의 실질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이자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 상승은 기존 채권가격을 하락시킨다.
② O. 앞으로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금 수요자는 변동이자율 대출을 선택하면 이후 낮아진 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③ O. 기존 채권의 약정 이자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 매력이 낮아져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 이자율이 내리면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둘은 부(-)의 관계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시중 이자율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시중 이자율 하락은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높이고 예금·채권에 비해 주식의 상대적 매력을 높이므로 주식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채권가격 관계를 주식가격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④를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채권가격은 상승하며, 주식가격에도 일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생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율이 변할 때는 먼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율 변화를 본다. 이자율 상승은 기존 채권가격 하락, 이자율 하락은 기존 채권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주식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자율 하락이 현재가치와 상대적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암기 포인트

물가상승 기대↑ → 명목이자율↑ → 기존 채권가격↓, 이자율↓ → 채권가격↑ · 주식가격 상승 요인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원시사회인 A사회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물품화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사회의 경제생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사회는 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물물교환을 하거나 조개껍데기와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옥돌을 쉽게 채취할 수 있으며, 상품 거래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각각 40%와 80%로 차이가 있다. 물물교환을 하거나 물품화폐를 사용한 거래에서 탐색비용은 거래마다 발생하고 상대방을 찾을 확률의 역수로 정의한다.

① A사회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은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수단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개수단으로 옥돌이 조개껍데기보다 널리 통용될 수 있다.

③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50%라면, 물물교환이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④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25%라면, 물물교환이 조개껍데기를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탐색비용을 상대방을 찾을 확률의 역수로 계산하고, 직접 물물교환과 물품화폐를 거치는 거래의 총비용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 물물교환은 소고기와 쌀을 한 번에 바꾸므로 거래가 1회이다. 물품화폐를 이용하면 소고기→물품화폐, 물품화폐→쌀의 거래가 필요하므로 거래가 2회이다.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조개껍데기 40%, 옥돌 80%이며, 탐색비용은 거래마다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거래 1회의 탐색비용은 $1/p$이다. 같은 확률로 두 번 거래해야 하는 물품화폐의 총탐색비용은 $2/p$이다. 여기서 p는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다. 확률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빨리 찾을 수 있으므로 탐색비용이 작아진다.

계산 과정

옥돌 사용 시 총탐색비용: $2/0.8 = 2.5$
조개껍데기 사용 시 총탐색비용: $2/0.4 = 5$
물물교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50%일 때: $1/0.5 = 2$
물물교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25%일 때: $1/0.25 = 4$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조개껍데기와 옥돌은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는 물품화폐이며,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가치 척도와 구매력을 보유하는 가치 저장수단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② O. 옥돌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80%로 조개껍데기의 40%보다 높다. 옥돌은 탐색비용이 더 낮아 매개수단으로 선택될 유인이 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통용될 수 있다.
③ O. 물물교환의 탐색비용은 2이고 옥돌을 이용한 두 번의 거래에 드는 총탐색비용은 2.5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물물교환의 탐색비용이 더 적다.
④ X. 물물교환의 탐색비용은 4이고 조개껍데기를 이용한 두 번의 거래에 드는 총탐색비용은 5이다. '물물교환이 더 많이 들어간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물물교환이 조개껍데기 사용보다 탐색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오답 포인트

물품화폐의 확률에 한 번만 역수를 취하면 ③과 ④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물품화폐는 소고기를 화폐로 바꾸고 다시 화폐를 쌀로 바꾸는 두 번의 거래가 필요하므로 각 거래의 탐색비용을 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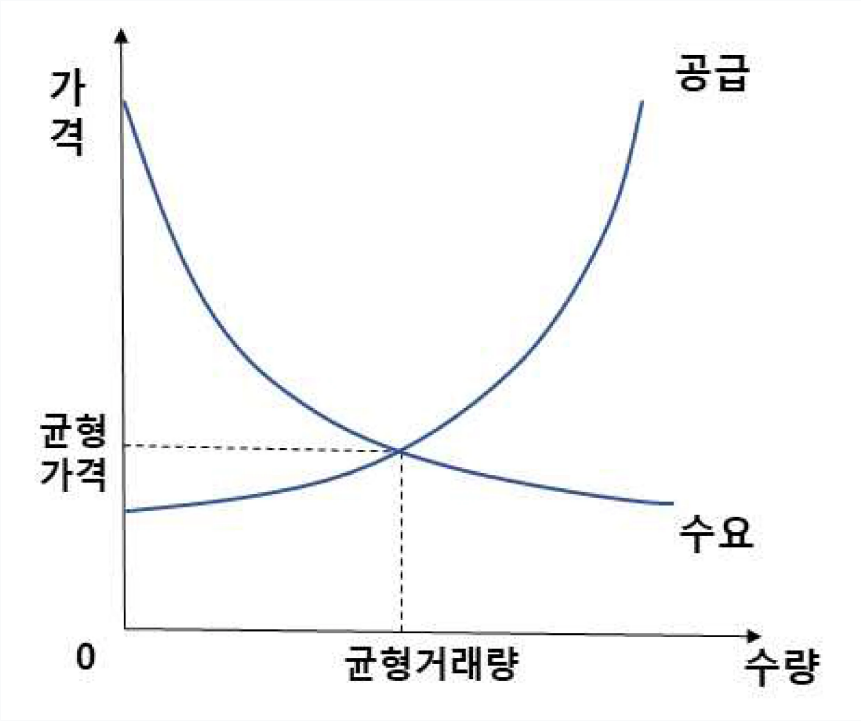
먼저 교환 경로에 필요한 거래 횟수를 센다. 각 거래의 상대방 발견 확률에 역수를 취한 뒤 모두 합하고, 직접 물물교환의 비용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탐색비용은 확률의 역수이고, 물품화폐 거래는 '상품→화폐→상품'의 두 단계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그림은 노트북PC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여 준다. 소비, 불확실성, 이자율, 부품 가격의 변화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소비의 증가는 거래량 증가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불확실성의 증가는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 이자율의 상승은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부품 가격의 하락은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어느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에 따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수요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모두 증가시킨다.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한다. 공급 증가는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한다.
㉠ 소비 증가: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 불확실성 증가: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 이자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 부품 가격 하락: 생산비 감소에 따른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맞지만 ㉡은 틀리다. ㉡의 틀린 표현은 '시장가격 하락'이며, 불확실성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옳은 조합은 ㉠㉢이다.
② O — ㉠은 소비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은 이자율 상승으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 공급이 감소하므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이 모두 적절하다.
③ X — ㉡과 ㉣이 모두 틀리다. ㉡은 '시장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가격 상승'이고, ㉣은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거래량 증가'이다. 옳은 조합은 ㉠㉢이다.
④ X — ㉢은 맞지만 ㉣은 틀리고, 옳은 ㉠이 빠져 있다. 부품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낮아져 공급이 증가하므로 시장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아니라 ㉠㉢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 하락을 보면 거래량도 함께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급 증가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의 '거래량 감소'가 함정이다. 또한 공급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은 올리므로 ㉡의 '시장가격 하락'도 틀린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화 요인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을 이동시키는지 정한 뒤 이동 방향을 판단한다.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고,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격 하락·거래량 증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수요 이동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 공급 이동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1. 경기변동의 원인과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기업가의 심리 상태가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경기하강국면에는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과 물가상승률이 증가한다.

③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보통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더 짧다.

④ 경기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과열의 징표로 나타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기변동의 원인과 확장·수축 국면에서 나타나는 소득, 소비, 고용, 물가의 일반적 움직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기변동은 실질 GDP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소비자·기업가의 낙관과 비관, 투자 기대 같은 심리적 요인도 소비와 투자를 변화시켜 경기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장기에는 생산·소득·소비·고용이 늘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며, 수축기에는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비자와 기업가의 낙관·비관 및 미래에 대한 기대는 소비와 투자 결정을 바꾸므로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X — 틀린 부분은 '고용과 물가상승률이 증가한다'이다. 경기하강국면에는 생산과 총수요가 위축되어 소득·소비뿐 아니라 고용도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 압력도 둔화된다. 올바르게는 '소득·소비·고용이 감소하고 물가상승률도 대체로 낮아진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더 짧다'이다. 경기변동의 주기와 폭은 불규칙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더 길다. 올바르게는 '경기변동은 불규칙하며 보통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더 길다'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과열의 징표'라는 표현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 같은 비용 요인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경기과열을 뜻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인플레이션은 경기과열뿐 아니라 비용 상승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고용'과 '실업'을 바꾸어 읽게 하는 함정이고, ③은 확장기와 수축기의 일반적인 지속 기간을 뒤집은 선지이다. ④의 '항상'은 비용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틀린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총수요 중심의 일반적인 경기 방향을 잡는다. 확장기에는 생산·소득·소비·고용이 함께 증가하고, 수축기에는 대체로 함께 감소한다. 이어서 '항상' 같은 단정 표현이 공급 충격이나 비용 상승의 예외를 무시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낙관은 소비·투자를 늘리고 비관은 줄인다. 확장은 길고 수축은 짧은 편이며, 인플레이션이 곧 경기과열인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갑국과 을국에서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다.
각 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 무역을 한다. 갑국은 원화를 화폐로 사용하고, 을국은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며, 국제시장에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에 거래된다. 현재 X재 1개와 Y재 1개의 제품가격은 각각 갑국에서 5,000원과 1,000원으로, 을국에서 5달러와 1달러로 형성되어 있다. 두 나라의 교역조건과 환율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는 국제시장에서 재화가 생산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된다. 또한,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은 없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추가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X재	Y재
갑국	2	8
을국	3	18

<보기>

㉠ 갑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변화하면 을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변화하면 갑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 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율(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자 1명의 생산량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찾고, 환율 변화가 수출재와 수입재의 상대가격 및 무역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갑국: 노동자 1명이 X재 2개 또는 Y재 8개를 생산하므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4개이고,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X재 0.25개이다.
을국: 노동자 1명이 X재 3개 또는 Y재 18개를 생산하므로 X재 1개의 기회비용은 Y재 6개이고, Y재 1개의 기회비용은 X재 1/6개이다.
따라서 X재의 비교우위는 갑국, Y재의 비교우위는 을국에 있다. 갑국은 X재에, 을국은 Y재에 특화한다.

사용할 공식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은 그 재화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이다.
갑국의 X재 기회비용: 8/2 = 4단위의 Y재
을국의 X재 기회비용: 18/3 = 6단위의 Y재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가 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환율 변화는 두 나라 통화로 표시된 재화 가격을 같은 통화로 환산해 비교한다.

계산 과정

1. 최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갑국의 X재 1개 가격 5,000원은 5달러이고, 을국의 Y재 1개 가격은 1달러이다. 따라서 교역조건은 X재 1개 대 Y재 5개로, 두 나라의 X재 기회비용인 Y재 4개와 6개 사이에 있어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는다.
2. 환율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을국의 Y재 1개는 갑국 통화로 900원이다. 갑국의 X재 1개 5,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Y재는 5000/900개로 늘어난다. 반대로 을국이 X재 1개를 사는 데 필요한 달러는 5000/900달러로 늘어나므로 을국의 무역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옳다.
3.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갑국의 X재 1개로 교환할 수 있는 Y재는 5000/1200개로 줄어든다. 갑국의 무역이익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은 틀리다.
4. 갑국의 수출이 늘면 을국은 갑국 재화의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므로 달러의 원화 가격인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과 ㉣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은 비교우위를 반대로 서술했다. 갑국의 X재 기회비용은 Y재 4개로 을국의 Y재 6개보다 낮고, 을국의 Y재 기회비용은 X재 1/6개로 갑국의 X재 0.25개보다 낮다. 올바르게는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이다. 따라서 ㉠과 ㉡을 묶은 ①은 틀리다.
② X — ㉡은 옳지만 ㉢이 틀리다.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갑국의 X재 1개로 살 수 있는 을국의 Y재가 5개에서 5000/1200개로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갑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이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1달러당 900원이 되면 을국이 갑국의 X재를 사는 달러 비용이 커져 무역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갑국의 수출 증가는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낮춘다.
④ X — ㉣은 옳지만 ㉢이 틀리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갑국이 수출한 X재로 얻을 수 있는 Y재 수량이 감소한다. ㉢의 '증가할 수 있다'는 '감소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를 곧바로 비교우위 국가로 판단하면 ㉠을 고르기 쉽다. 비교우위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결정된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가 싸지고 원화가 강해진다. 이때 을국은 같은 5,000원짜리 X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내므로 무역이익이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정한다. 다음으로 양국 가격을 하나의 통화로 환산해 교역조건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화 전후에 수출재 1단위로 수입재를 몇 단위 살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각국의 무역이익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낮은 기회비용, 수출 증가는 외화 공급 증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A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A국의 노동친화적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진시켜 분배 개선, 복지 확대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증가를 도모해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조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어.
을: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시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 구조 개편, 시장확대, 노동 생산성 증대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A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특히 A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이 미흡한 상태지. 그래서 임금 상승과 복지 증대는 경제활동의 고비용, 저효율로 이어져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뿐 아니라 부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는 시장 위험의 증가로 이어져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보기>
㉠ 갑은 A국의 경제 문제에서 수요보다 공급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 을은 A국에서 노동자의 소득증진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갑과 을은 세금 증대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갑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중요시하지만, 을은 국제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자의 소득과 정부 지출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려는 수요 중시 관점과 산업 고도화·생산성·세계 시장을 중시하는 공급 및 대외 경쟁력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의 관점: 노동자의 소득 증진과 정부 지출 확대가 소비와 내수를 늘리고, 그 결과 기업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수요 중시 관점이다. 키워드는 소득 증진, 분배 개선, 복지 확대, 정부 지출 확대이다.
을의 관점: 임금과 복지의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 구조 개편, 시장 확대, 노동 생산성 향상,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공급 및 대외 경쟁력 중시 관점이다. 키워드는 산업 고도화, 생산성, 세계 시장, 해외 투자이다.

NoteBase

보기 판단

㉠ X. 갑은 공급 부문의 개선이 수요보다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수요보다 공급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이다. 올바르게는 갑이 노동자의 소득 증진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와 내수를 늘리는 수요 부문의 개선을 중시한다고 해야 한다.
㉡ O. 을은 생산성 향상이 병행되지 않은 임금 상승과 복지 증대가 고비용·저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 증진이 생산성 저하 또는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부합한다.
㉢ X. 갑과 을 모두가 재정 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갑과 을은 … 재정지출을 줄이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다. 올바르게는 갑은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말하고, 을은 복지 증대에 따른 부채와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한다고 해야 한다.
㉣ O. 갑은 노동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와 기업 활동을 늘리는 내수 확대 효과를 중시한다. 을은 글로벌 가치사슬, 시장 확대, 해외 투자자의 반응을 강조하므로 국제경제협력과 대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은 갑의 수요 중시 관점을 공급 중시 관점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 대신 ㉣을 포함한 ㉡㉣이다.
② X. ㉡은 옳지만 ㉢은 갑도 재정 지출 축소를 원한다고 서술한 점이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③ O. 옳은 보기인 ㉡과 ㉣만을 고른 조합이다.
④ X. ㉣은 옳지만 ㉢은 갑의 정부 지출 확대 주장과 반대되므로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오답 포인트

갑의 '기업 활동 증가'만 보고 공급 중시 정책으로 판단하면 ㉠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갑이 제시한 출발점은 노동자의 소득 증진과 정부 지출 확대이므로 수요 확대이다. 또한 을이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는 사실이 곧 갑과 을 모두의 균형 재정 주장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의 최종 효과보다 정책이 처음 작동시키려는 경로를 확인한다. 소득·소비·정부 지출에서 출발하면 수요 중시, 생산성·산업 고도화·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출발하면 공급 및 대외 경쟁력 중시로 판단한다. 각 인물의 우려와 실제 주장을 구분하면 공통 입장을 과장한 보기를 제거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갑은 소득·지출·내수, 을은 생산성·산업 고도화·세계 시장이다.

NoteBase

문 14. (가)와 (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69세 무직 남성):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노인도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나) 을(47세 직장 여성):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 진단부터 기초적인 암 검사까지 모두 무료예요. 몇 년 전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셨을 때는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 부담이 한결 줄었어요.

① (가)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의 종류로는 의료 급여 제도 등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만을 위한 제도이다.
④ (가)와 (나)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례에서 (가)를 공공 부조, (나)를 사회 보험으로 파악하고 두 제도의 대상, 비용 부담 방식, 가입 방식 및 급여 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노인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 연금의 사례이므로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나)는 직장 가입자가 건강 검진과 질병 치료에 관한 보험 급여를 받는 국민 건강 보험의 사례이므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 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산업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등이 보험료를 분담하고 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이며,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 교과의 일반적 분류에서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NoteBase

적용 기준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의 재정으로 생활을 보장받는지는 공공 부조의 판단 기준이고, 보험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급여를 받는지는 사회 보험의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공공 부조와 (나)의 사회 보험은 모두 사회 교과의 일반적 분류에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X — '의료 급여 제도'는 (나)와 같은 사회 보험이 아니라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가 (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X — '모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만을 위한 제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공공 부조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④ X —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강제 가입은 사회 보험의 원칙이고, 공공 부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나)에 건강 검진과 암 수술이 제시되어 의료 급여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가 보험 급여를 받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나)는 국민 건강 보험이고, 의료 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부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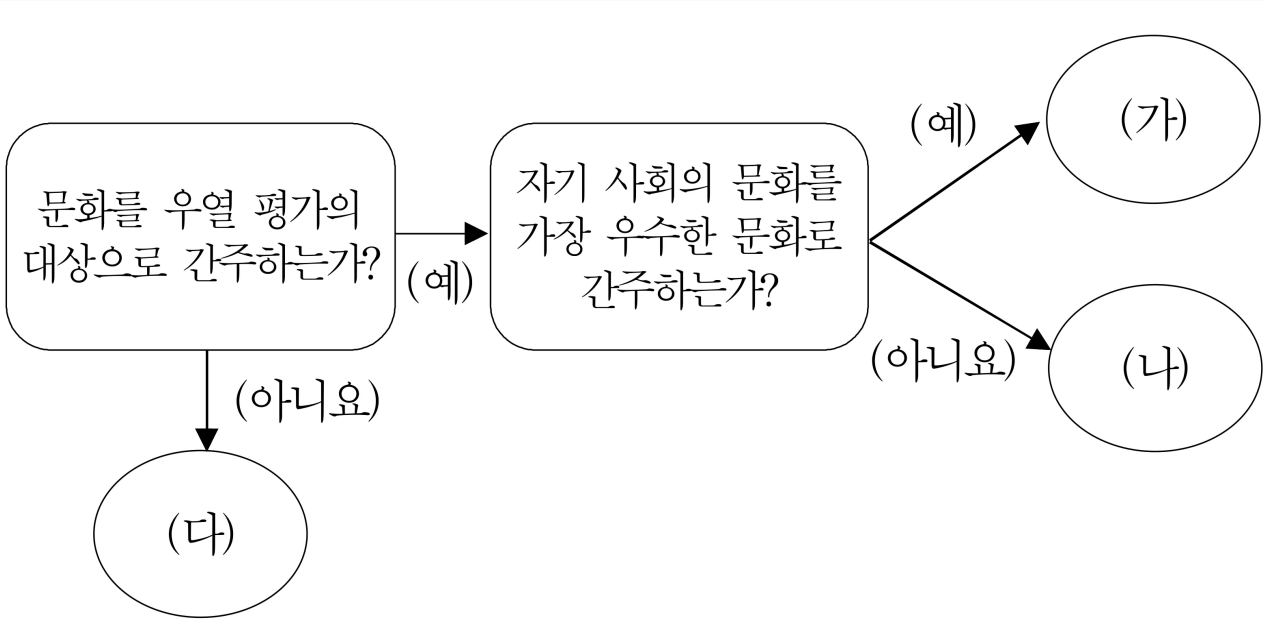
보험료를 기초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 사회 보험, 국가 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 공공 부조, 상담·돌봄·재활처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보험료·강제 가입, 공공 부조는 무기여·선별 지원,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가), (나), (다)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① (가)는 국수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나)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③ (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④ (가), (나), (다)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화 간 우열 판단 여부와 자기 문화의 우월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만 자기 문화보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문화 사이에 우열을 매기지 않고 각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자기 문화만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른 문화를 배척하여 국수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② O —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다른 사회의 문화를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③ O —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서로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맥락을 인정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 (나), (다)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한다'이다. (가)와 (나)는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지만, (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회의 고유한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가)와 (나)는 어느 문화를 더 우수하다고 보는지만 다를 뿐 모두 문화 간 우열을 전제한다. 반면 (다)는 우열 평가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우열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화 상대주의이고, 우열을 인정한다면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하게 보는 경우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른 사회의 문화를 더 우수하게 보는 경우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암기 포인트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가 최고', 문화 사대주의는 '남의 문화가 최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16.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의 선택이란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개인은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에 구속된다.
(나)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사회가 강제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다.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② (가)와 (나) 모두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③ (나)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학은 개인에 대하여 외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나)는 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인보다 사회 구조의 독자성과 구속력을 중시하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명목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사회 실재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사회 구조, 외적 구속력, 제도 개혁이다.
(나) 사회 명목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이름이며 개인의 자율적·능동적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개인의 속성, 자율성, 개인의 의식과 노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와 (나) 모두'라는 부분이 틀렸다. 개인이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사회 구조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가)의 입장이다. (나)는 개인을 사회의 구성 단위이자 자율적인 능동적 존재로 본다.
② X — '(가)와 (나) 모두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가)는 사회를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지만, (나)는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므로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과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X — '(나)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개인에게 외재하면서 구속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관점은 (나)가 아니라 사회 실재론인 (가)이다.
④ O — (가)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을 구속한다고 보므로 사회 문제의 해결에서 사회 제도의 개혁을 강조한다. (나)는 자율적인 개인을 사회 현상의 출발점으로 보므로 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외적 구속력'이라는 전형적인 사회 실재론의 표현을 (나)에 붙여 놓은 선지이다. 또한 ①과 ②는 서로 반대되는 두 관점의 특징을 '모두'의 공통점처럼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가 개인을 구속하고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하면 사회 실재론으로,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고 개인의 자율성과 의식 변화를 강조하면 사회 명목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실재론은 '사회 구조가 개인을 구속', 사회 명목론은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를 구성'이다.

NoteBase

문 17.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회 과학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출청소년의 학교생활 재적응 과정에 대한 생애사
- 코로나 시대 독거 노인이 느끼는 불안의 의미
- 팬덤 구성원의 행위 규범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보기>

㉠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 계량화가 어려운 주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활용된다.
㉣ 연구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연구 주제에 적합한 질적 연구의 특징을 양적 연구의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행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제에 적합하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활용한다.
양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수치로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특징은 ㉡과 ㉢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 법칙을 발견한다'는 양적 연구의 특징이므로 ㉠㉣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O — 질적 연구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적합하고,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활용되므로 ㉡㉢이 옳다.
③ X — ㉤의 '연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측정을 중시하는 양적 연구의 특징이므로 ㉡㉤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④ X — ㉤은 양적 연구의 특징이고, 질적 연구의 특징인 ㉡이 빠져 있으므로 ㉢㉤은 옳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의 '가설 검증·설명 법칙 발견'과 ㉤의 '조작적 정의'는 모두 수치화와 측정을 전제로 하는 양적 연구의 표현이다. 연구자의 통찰이 활용된다는 이유만 보고 ㉠이나 ㉤까지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묶으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주제가 개인의 경험, 불안의 의미, 규범 형성 과정처럼 주관적 의미와 과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질적 연구로 판단하고, '계량화 곤란·직관적 통찰'을 고르며 '가설 검증·법칙 발견·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질적 연구는 의미 이해·통찰, 양적 연구는 가설 검증·법칙 발견·조작적 정의이다.

NoteBase

문 18. 일탈 행동에 대한 (갑)과 (을)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우리 사회의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고무시키지만, 모두가 이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서,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한 특정 계층은 성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을):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나 범죄자로 단정 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갑)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사회 규범의 회복을 강조한다.

② (갑)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본다.

③ (을)은 정상과 일탈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우리 사회 특정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응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탈의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에서 찾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타인의 낙인 및 사회적 반응에서 찾는 낙인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 머튼의 아노미 이론: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핵심 해결 방향은 합법적 기회의 확대이다.
(을) 낙인 이론: 특정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일탈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과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강화한다고 본다.
두 이론의 차이는 (갑)이 사회 구조의 기회 불평등에, (을)이 타인의 규정과 부정적 반응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므로 제도화된 수단에 접근할 기회가 계층별로 불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사회 규범의 회복'이다. 올바르게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본다.
② O — 문화적 목표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기회를 넓히면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므로 (갑)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O — 낙인 이론은 행위의 본질적 속성만으로 정상과 일탈을 가르는 절대적·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반응하는지를 중시한다.
④ O — 특정 계층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응이 낙인을 만들고, 당사자가 그 낙인을 내면화하면 이차적 일탈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을)의 관점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물질적 성공'이라는 말만 보고 (갑)의 설명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갑)의 핵심은 물질만능주의 자체를 비판하거나 규범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고, 모두에게 성공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합법적 수단은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구조적 괴리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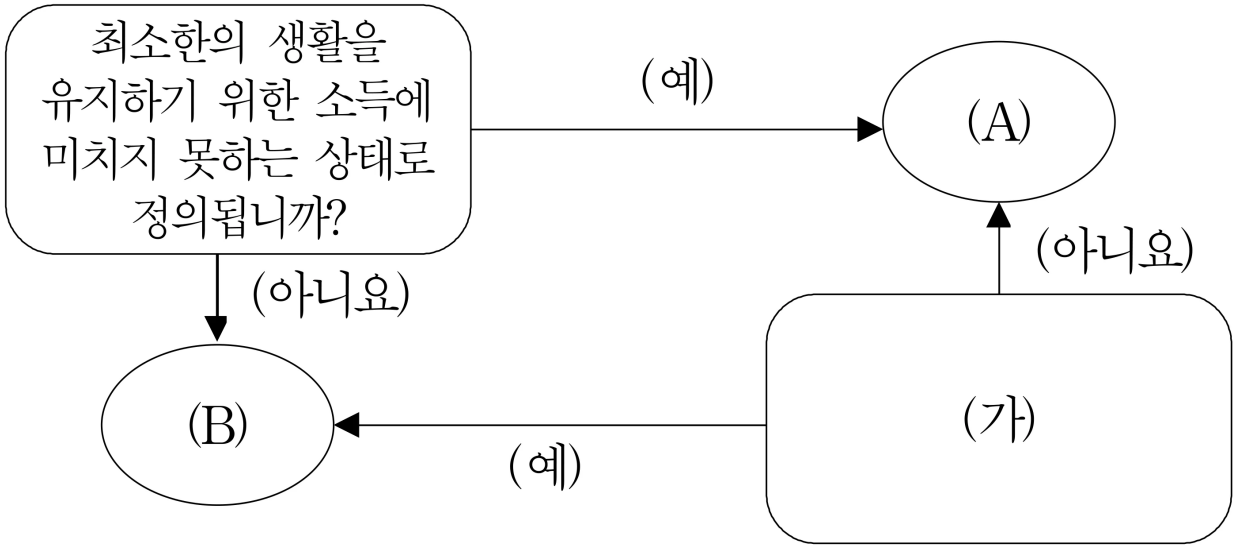
'성공 목표는 공유하지만 합법적 기회가 부족하다'는 단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문제아로 규정된다·사회적 반응·자아 정체성·이차적 일탈'이라는 단서는 낙인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 낙인 이론은 사회적 규정과 이차적 일탈이다.

NoteBase

문 19. 빈곤 유형 (A)와 (B)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보기>

㉠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B)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 (A)와 (B)를 더한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 (가)는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 여부를 의미한다.

㉥ (B)는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도식의 첫 질문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판별하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A)는 절대적 빈곤, (B)는 사회의 일반적 생활 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이다.

NoteBase

보기 판단

㉠ X —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틀린 표현인 '나타나지 않는다'는 '나타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 O —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분포와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해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 O —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모두 일정한 소득 기준선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류된다. 개인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빈곤과 구별된다.
㉣ X —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은 서로 겹칠 수 있으므로 두 빈곤율을 단순히 더한 값이 전체 빈곤율이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더한 것이'는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한 합집합의 비율이'로 고쳐야 한다.
㉤ X — (가)는 '예'라고 답하면 상대적 빈곤인 (B)로 이어지는 판별 질문이어야 한다.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여부는 주관적 빈곤의 기준이므로, 올바르게는 사회의 일반적 생활 수준이나 다른 구성원의 소득과 비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어야 한다.
㉥ O —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 등 사회 내부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은 옳지만, 절대적 빈곤이 고소득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틀렸다. ㉠은 고소득 국가에서도 절대적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 ㉡과 ㉢은 옳지만, (가)를 주관적 빈곤 여부로 설명한 ㉤이 틀렸다. (가)는 상대적 빈곤을 가르는 객관적 비교 기준에 관한 질문이어야 한다.
③ O — ㉡, ㉢, ㉥은 모두 상대적 빈곤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빈곤 분류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다.
④ X — ㉥은 옳지만 ㉣과 ㉤이 틀렸다. 두 빈곤율은 중복 때문에 단순 합산할 수 없고, (가)는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판별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절대적'이라는 말을 '후진국에서만 발생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서로 겹치지 않는 비율처럼 더하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상대적 빈곤은 객관적인 소득 비교 기준이고, 개인의 체감에 따르는 주관적 빈곤과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소 생활 유지 기준이면 절대적 빈곤, 사회 구성원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과의 비교 기준이면 상대적 빈곤,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빈곤이면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한다. 집단이 겹칠 수 있는 두 비율은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최소 생활은 절대적 빈곤, 사회와의 비교는 상대적 빈곤, 개인의 느낌은 주관적 빈곤이다.

NoteBase

문 20.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계층은 재산, 권력, 위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형성된다. 지위 집단의 차이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나) 역사 발전 단계별로 주요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 관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① (가)는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② (가)와 (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가)와 (나) 모두 사회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파악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는 베버의 계층론과 생산 수단의 소유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가) 베버의 계층론: 재산·권력·위신 등 여러 요인이 사회 계층을 형성한다고 보는 다차원론이다.
(나) 마르크스의 계급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형성된다고 보는 일원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강한 계급 귀속 의식과 계급 간 대립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마르크스 계급론이다. (가)의 베버 계층론은 여러 계층적 지위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집단 간 경계와 귀속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② O — (가)는 재산을 사회 계층의 한 요인으로 보고, (나)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를 계급 구분의 핵심으로 본다. 따라서 두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을 설명할 때 경제적 요인을 적용한다.
③ X — '(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지위 불일치는 재산·권력·위신 등 여러 차원의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므로 다차원적 관점인 (가)의 베버 계층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X — '(가)와 (나) 모두 사회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나)의 마르크스 계급론은 계급을 불연속적으로 구분하지만, (가)의 베버 계층론은 다양한 계층적 위치가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가)에도 '지위 집단'이라는 표현이 있어 강한 집단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강한 귀속 의식과 불연속적 계급 구분은 마르크스, 지위 불일치와 연속적 계층화는 베버에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산·권력·위신처럼 여러 기준이 나오면 베버의 다차원론, 생산 수단의 소유와 지배·피지배 관계가 나오면 마르크스의 계급론으로 판단한다. 두 이론 모두 경제적 요인을 인정하지만, 베버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베버는 재산·권력·위신의 다차원·연속·지위 불일치,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 소유의 일원·불연속·강한 계급 의식이다.

NoteBase